화순 동복·순천 옥천·강진 병영에 기후대응댐 건설한다

동복천댐 저수용량 확보·순천·강진은 홍수조절용으로 건설 환경부, 전국 14곳에 댐 건설 추진 …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

화순 동복에 저수용량 3100 t 규모의 용수 전용 댐이 신규로 건설된다. 순천 옥천과 강진 병영천 댐 의 경우 홍수 조절 및 가뭄 예방, 안정적 물 수요 확 보를 위해 기존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형태로 댐 건 석이 추지되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 3개 댐 후보지를 비롯,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전국 14곳(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과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려면 현재의 댐 외에 추가 댐 건설이 불가피 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착공한 보현산(경북 영천) 다목적 댐 이후 처음으로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재개발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용수 전용댐으로 순천 주암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화순 동복천댐을 짓기 로 했다.

동복천댐(길이 292m, 높이 26m)은 저수용량 3100t 규모로 건설된다. 건설비 2740억원은 환경 부(90%)와 수자원공사(10%)가 책임진다.

최근 몇 년 전 심각한 가뭄으로 한 때 주암댐 저수율이 17%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 환경부는 동복 천댐을 조성한 뒤 이 곳에 물을 가뒀다가 흘려보내 는 방식으로 극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 다는 구상이다.

홍수조절용으로는 순천과 강진 지역이 후보지로 서정됐다

순천 와룡저수지(와룡동 168번지·길이 280m, 높이 32m)의 경우 지난 1963년 준공된 점을 감안 해 리모델링을 거쳐 홍수조절댐으로 활용된다. 총 저수용량은 228만t에서 230만t으로 수용능력이 늘 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 홈골댐(병영면 지로리 230·길이 370m, 높이 19m)도 수용용량이 기존 40만t에서 190만t으로 늘어난다. 이곳은 1985년 세워져 안전등급 C등급으로, 지난 2012년에는 범람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취약지대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통해 후보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전남에서는 화순(와룡댐), 장흥(장흥댐 하류), 강진(홈골댐), 영광(월암천), 고흥(금산면, 봉래 면, 우천저수지)에서 댐 신규 및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했었다.

환경부는 90%의 예산을 지원해 홍수조절용 댐 개발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협의 후에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로 반영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주민공청회는 8월 중 열릴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댐 건설 후보지 발표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후위기를 볼모로 토건(土建)사업을 살리기 위한 기후문맹적 발상" 이라며 "제방 정비 및 반지하 등 홍수 취약지 주거 개선, 습지와 같은 홍수터 복원 등 홍수 대응 패러 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의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 환경부는 화순 동복에 저수용량 3100 t 규모의 용수전용댐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ieans@kwangiu.co.kr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지방의원 줄서기 '구태'

신수정 시의장, 후보 지지 문자 윤리심판원에 제소 당하기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원내와 원외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줄 서기'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 의장이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발송하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되는 등 지 방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가 맞붙은 가운데지역 시·구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구태의연한 '줄 서기'를 답습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내세워 특정 후보지지 문자를 보낸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개인 의원 이름이 아닌 시의회의 대표성을 따는 '의장'을 내걸고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확인 결과, 지역 한 당원이 신 의장을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

수당인 민주당 의원 간 소통 부족으로 상임위원장 재선거를 치르는 등 의장단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신 의장의 이번 문자 발송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 구성 과정에 있던 내부 분열을 수습해야 할 의장이 다른 분열의 현장인 시당 위원장 선거에 의장직을 내세워 나서면서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건이다.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당규에 따라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구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어 일부 당원들의반발을 사고 있다.

강위원 상임대표는 양부남 의원이 시·구의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그들의 단체 문제를 대신보낸다고 주장하는 등 시·구의원들의 줄 서기 구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 신 의장은 "동의 하에 문자 전송 업체를 통해 대신 보내달라고 했다. 기존에 이용하는 발송 업체이다 보니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며 "'의 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 럽게 직함을 사용한 것이다. 정치는 늘 판단과 선 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지 결정이었을 뿐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과열되면 서 후보 간 흠집 내기까지 난무하며 고발전도 이 어지고 있다.

양부남 의원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강위원 상임 대표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성추행 등 과거 전 적이 담긴 기사를 문자로 공유했고, 강 상임대표 선거대책본부 측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 위사실을 공표한 이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밝히면서 시당위원장 선거가 검찰 수사 로까지 이어질 분위기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당 위원장 선거가 네거티 브전으로 혼탁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공천권 다툼'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원 중심'을 외치고 있는 만큼 과열 양상을 보이 기보다 깨끗한 선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 다. 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양부남(서구을) 국회 의원과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의 투표 결과는 오는 8월4일 나온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尹 "금투세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 낮추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 다"고 말했다.

또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 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 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 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 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 경 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고 막했다.

또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 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 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